

대만 양돈산업 딜레마에 봉착

- 홍 보 부 -

대만의 양돈산업이 농가소득증대와 축산공해 유발이라는 국민들의 관심속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만정부는 농촌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건설의 가속화」와 「肉豚産銷조정방안」이라는 두 계획을 오랫동안 실시해서 균형 잡힌 생산공급제도의 확립, 돼지고기값의 안정화, 양돈농가의 이익보장 등을 위한 조치를 순조롭게 집행해 왔다.

그 결과 돼지 사육두수는 '71년 300만두에서 '90년엔 856만두로 증가하여 농산물 총생산액의 21.6%를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대일 수출에서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의 5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대만의 양돈산업은 농업생산의 가장중요한 부문으로 그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양돈산업의 발전은 수자원과 환경오염의 공해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어 그동안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대만정부는 '91년 9월 축산공해에 대응하고 양돈의 자급자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양돈정책조정방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①단기간에 양돈두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생산두수가 감소된다. ②장기저리용자로 양돈장을 보조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특히 수자원보호와 도시계획 등의 구역안에 있는 양돈장은 우선적으로 지도 개선한다. ③양돈업자의 전업을 적극 지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의 양돈두수는 1천만두를 돌파했으며, 500두 이상의

양돈농가호수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변함없이 실행할 방침이다.

그 실천방안은 ①3천두 이상의 양돈장에는 수출용과 국내소비용 돼지고기는 규제에 합당한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양돈장에서만 수매한다. ③폐수처리을 설치한 양돈장 단속을 게을리한 지방행정기관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고액분리와 발효처리를 병행하여 오수원과 오수량을 줄인다. ⑤양돈두수의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⑥양돈업자의 지원을 위한 신직업기술의 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펼쳐놓고 있다.

수출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생산조정을 위한 수출금지도, 수출장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95년에는 양돈두수 규모를 자급자족(약 600만두)의 체제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만의 돼지고기는 일본의 전체 수입량중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품질 좋고 위생적이며 값도 싸기 때문에 일본의 돼지고기 가공업자와 소비자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폐수처리 시설의 기준과 양돈두수의 제한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어서 돼지고기는 점차 생산량이 감소되고, 생산비의 상승은 불가피할 듯 하다.

한편, 규모의 경제에 따른 양돈업의 기업화, 사육관리 기술의 개선, 질병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등으로 양돈경영상 유리한 면도 없지 않다.

〈대만 해외뉴스 역〉